

社說

현금살포 공약은 합법적 대표행위

1인당 100만 원을 주겠다. 가구당 500만 원을 준다. 출산과 주거를 묶어서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군산시장 후보들이 경쟁하듯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꽃인 지방선거에서 불쌍사나운 현금 살포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현금 살포 공약은 민주주의 타락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다. "나를 뽑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공약은 나랏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다양하다. 남은 예산을 시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에너지 지원금으로 돌려주겠다며 유권자의 귀를 사로잡는다. 그러나 재원 조달 계획이 빠진 장밋빛 약속은 꾀변이다. 미래 세대 지갑을 털어서 현재 권력을 갖겠다는 현금 지원 약속은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지고 각종 예산을 감아먹을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 주머니를 털어서 현재 권력을 쥐겠다는 발상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은 교육감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돈다지만 교육감 후보조차 학생에게 돈을 나눠준다는 공약을 남발한다. 학원에서 학습하고 학교에서 자는 학생이 넘치고,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이 쏟아지는데, 교육감이 되겠다는 후보가 현금 살포를 앞세워 뽑아달라고 호소해서야 되겠다는가.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데 쓰여야 할 재원이 생색내기용 현금으로 사라진다니 한국 교육의 미래가 어둡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현금 살포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예비수장들이 앞다투어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광경을 정부는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국가 재정은 무한하게 쏟아지는 화수분이 아니다.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나랏돈으로 감투를 차지하려는 폐단의 씨를 잘라야 한다. 유권자도 손에 쥐게 될 몇십만 원이 훗날 우리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계산서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고용 인력 증대 외국인·여성 늘려야

우리나라의 고용 인구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세워야겠다. 고용 촉진 없이 현행 구조가 지속될 경우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종사자가 10년 후 24만 명 줄어들 것이라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 대안별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48만 명에서 2032년에는 424만 명으로 24만 명(5.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청장년층이 줄어들기에 주요 7개국(G7) 평균의 절반 수준인 외국인 인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과제가 적지 않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의 통합적 관리가 시급하다. 이주노동자는 마등록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15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 이직, 능력 개발, 노동 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정책이 비자 발급에만 치우쳐 있어 모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비자 체계와 노동시장 정책을 통합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법무부·노동부·해양수산부 등 비자 유형에 따라 여러 부처로 쪼개진 채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분절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제고도 화급하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 인력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되는 시대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 특성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 단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사회적 비용과 인력 손실, 저출산 초고령화 불균형 사회 촉발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제조업 고령화를 막기 위한 정부와 기업, 노동단체의 협력이 긴요하다.

교실 폭력 위험 수위 넘었다



데일리 Talk

최영호 사회부 기자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수위가 예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충남 계룡 고교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은 그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학교 안에서, 그것도 학생이 교사를 향해 흉기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하다.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불안을 더 키운다.

최근 몇 년 사이 교사 대상 폭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예전처럼 말다툼이나 수업 방해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손이 올라가고 흉기가 등장하는 장면까지 이어진다. 교실 안 갈등이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기존의 생활지도 방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가 갖춘 안전 장치는 현실과 어긋난 모습이다. 출입 통제나 CCTV, 순찰 강화는 외부 침입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

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대부분 내부에서 벌어진다. 학생이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실제 상황에서는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이어진다.

교사에 대한 폭력이 발생해도 기록으로 남지 않거나 징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이어진다.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는 분위기와 민원 부담이 겹치면서 문제를 조용히 넘기려는 선택이 반복된다. 그 사이에서 교사는 한발 물러서게 되고, 폭력은 점점 강도를 키운다. 신고가 적은 배경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수업 중 위협적인 행동이나 반복되는 방해가 이어지는 장면도 적지 않다. 뚜렷한 조치 없이 넘어가는 상황이 쌓이면서 교실 안 긴장은 점점 높아진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양상이 반복됐다.

교사 대상 폭력은 발생 사실이 남지 않으면 이후 대응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반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개입 시점도 놓치게 된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처리 방식이 이어질수록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흐름도 끊기지 않는다.

교사가 혼자 문제를 감당하는 장면도 현장에서 흔하다.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해도 개인이 대응을 떠안는 구조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갈등은 더 커지고, 교실 안 긴장도 함께 높아진다.

위험 물품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부 지원으로 즉시 연결되지 않는 사례도 이어진다.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는 수준의 장비로는 실제 위험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상담과 관리 역시 기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더라도 바로 개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흐름이 이어진다. 시기를 놓친 대응은 결국 효과를 내기 어렵다.

학교는 교육 이전에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교사에 대한 폭력 상황에서 즉각적인 제지와 분리가 이뤄지고 학교와 교육청이 동시에 개입하는 대응이 작동하지 않으면 같은 유형의 사건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chy@skyedaily.com

코앞으로 다가온 5세대 실손보험



바른 보험

김덕용 카라멜에셋 바른보험지점 대표

5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조금은 더 저렴하겠지만 어차피 4세대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가 5년인 만큼 5년 동안만이라도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가입 후 보장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이미저도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다. 따라서 가입연령과 현재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반면, 재가입 주기가 있는 2세대 실손보험을 비롯하여 3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이라면 무엇보다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언제 인지 파악부터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2013년 7월에 가입한 재가입 주기 15년형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2028년 7월이면 아마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이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2031년 3월까지의 4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 당시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이 되는 것이니 지금 전환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 아주 조심스럽긴 하지



시정성 이미지

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와 보험사 간의 대책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재매입안과 함께 보험료 할인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환영하고 있지 않아 조금은 지켜보는 것이 좋다.

그동안 실손 보험료가 많이 올라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고 결과를 떠나서 그냥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전환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깊을 것이다. 그렇다고 선불리 결정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로 해석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의미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앞서 이야기한 부분 정도는 참고하여 고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봉쇄(封鎖)와 소통(疏通)

중국 역사를 들여다보면 '물길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지금도 메콩강을 둘러싼 물길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륙 국가였으나, 그 패권의 완성 뒤에는 항상 물길의 장악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강(江)은 오늘날의 해협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내륙에서는 강물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했고, 바다에서는 해협(海峽)을 장악한 나라가 세계 경제를 휘둘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다. 오늘날 호르무즈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여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봉쇄(封鎖)'는 '문이나 길 따위를 굳게 잠그거나 막아서 드나들지 못하게 함, 전이나 평시에 해군력으로 상대국의 연안이나 항구의 교통을 차단하는 일'을 말한다.

역지로 막은 물길은 반드시 터지기 마련이며, 그 피해는 막는 자와 막히는 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인간이 자연을 자모를 수는 없다. 바닷물은 늘 그 자리에서 그대로 흘러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이나 대만 해협의 긴장은 단순한 군사적 수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생존을 담보로 한 거대한 언어적 불통의 결과이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소통(疏通: 막히지 않고 잘 통함)을 가르친다. 우리가 '말 길을 터주는 법을 가르치듯 국제사회도 소통의 방법을 익혀야 한다.

중부대한국어학과 명예교수·한국어문학회 회장

SkyeDaily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작대 주경준 주필 황종택 인쇄인 임채형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등록번호 서울아1703(인터넷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7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1부 1,300원/월 20,000원/년 240,0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